

빈곤원인 인식, 정부신뢰, 복지의식의 관계 연구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Poverty Cause,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Perception :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이진향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in-Hyang Lee(leejh2019@cs.ac.kr)

요약

본 연구의 주 목적은 빈곤원인 인식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빈곤원인 인식과 복지의식 간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가조사를 최종 완료한 만 20세 이상 가구원 2,0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설명력(R^2)의 변화량을 확인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원인 인식의 하위요인 중 개인책임론은 복지의식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인 반면, 사회구조책임론과 운명론은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둘째, 정부신뢰는 복지의식에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셋째,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는 일부 검증되었다. 즉, 빈곤원인 인식의 하위 요인 중 개인책임론과 복지의식 간, 그리고 사회구조책임론과 복지인식 간의 영향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결과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 향상을 위해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정부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강화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논의점 및 의의,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복지의식 | 빈곤원인 인식 | 정부신뢰 | 조절효과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poverty cause on the welfare perception,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f poverty cause and welfare perception. To this end, 2,027 members over the age of 20 who completed the supplementary survey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Korean Welfare Panel in 2019(14th). To analyze,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confirmed the explanatory force change. As a result of that: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awareness of poverty cause, the awareness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showed negative influence on welfare perception, while the awareness of social structure responsibility and fate showed a positive influence. Second, trust in government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n welfare percep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has been partially verified. In other words, among the sub-factors of awareness of poverty cause, it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welfare perception, and social structure responsibility theory and welfare perception. From this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inforcement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in government, as well as attitudes toward the cause of poverty,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welfare perception of social members. Based on this results, this study has proposed the implications, discuss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 keyword : | Welfare Perception | Awareness of Poverty Cause | Trust in Government | Moderating Effect |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창신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창신-2019-091)

접수일자 : 2021년 05월 21일

수정일자 : 2021년 06월 18일

심사완료일 : 2021년 06월 29일

교신저자 : 이진향, e-mail : leejh2019@cs.ac.kr

I. 서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저출산, 노인빈곤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복지확대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2019년 한국복지패널에 의하면, '선별적 복지'에 대한 찬성이 33.48%, 반대가 44.28%,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 비율이 22.43%로 나타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더디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

복지정책은 정치·경제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복지에 대한 인식 등의 영향을 받으며, 다른 사회정책에 비해 사회적 합의가 더욱 필요하다. 그 결과 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념이나 인식은 복지정책 수립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2][3]. 이에 복지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인 복지의식은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복지정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4].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복지국가로의 발전 방향성을 예측해 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5].

사회구성원의 빈곤에 대한 태도는 국가의 사회복지체계의 특성, 빈곤대책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6]. 실제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에 돌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회가 빈곤계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고, 사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7].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귀인과 사회적 귀인 중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는가는 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높아[3][6], 잔여적 성격의 복지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경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8].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지향 및 복지확대 경향성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세금부담 증가를 의미한다[9]. 복지확

대의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단기적 및 장기적 이익, 그리고 개인적 및 사회적 이익 사이에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10]. 이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장단기적 이익 그리고 사회적 이익 및 비용을 감안하여 복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때 각 개인에게 '자기피해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정부의 능력과 선의에 대한 믿음[11]'이 있다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넘어 복지정책에 대한 동의를 보인다는 것이다[9].

정부신뢰는 구성원들이 정부에 대해 갖는 주관적 '해석'의 결과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태도이다[12]. 정부신뢰가 복지인식에 중요한 변수임은 선행연구들에서도 확인된다. 즉, 정부신뢰도가 높은 구성원들은 세금징수나 국가의 세금납부 가능성에 덜 비판적이며[13], 복지정책 수행기관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복지예산 확대 동의에 있어 중요하다[14]. 또한 정부의 역량 및 기관에 대한 신뢰가 향상됨에 따라 복지관련 증세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도 보다 긍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15].

더 나아가 정부신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이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사 및 행동을 결정하게 한다[12]. 즉, 빈곤, 경제적 여건 등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조건이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구성원들의 정부신뢰도가 높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 순응도는 높은 반면, 정부신뢰가 낮은 경우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낮아지며 정책순응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16].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을 개인 또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인식하는지가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부신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는 구성원들의 복지의식과 정부의 복지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빈곤원인 인식과 정부신뢰를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특히 빈곤원인 인식과 복지의식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완충역할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빈곤원인 인식, 정부신뢰, 복지의식

간의 통합적 영향 관계를 살피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들의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의식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복지의식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국가의 복지정책에 중요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원인 인식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빈곤원인 인식과 복지의식 간의 영향 관계를 정부신뢰는 조절효과를 갖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9 한국복지패널 조사 14차 연도 자료이다. 이 조사는 다단계 층화무작위추출법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추출하였고, 가구원과 가구용 설문 외에 복지의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포함하여 전 국민을 표본으로 하는 복지의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14차 연도 복지의식 부가조사는 11차 연도 복지의식 부가조사 대상자 중 13차 연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과 추가로 13차 기준 만 18-21세에 속하는 가구원을 포함한 2,388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17]. 이 중 부가조사를 최종 완료한 2,027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44.4%, 여성이 55.6%의 분포를 보였고, 나이는 20대가 12.6%, 30대 13.3%, 40대 22.9%, 50대 23.0%, 60대 17.2%, 70대 이상이 11.0%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무학 1.9%, 초등학교 9.7%, 중학교 10.0%, 고등학교 25.5%, 대학(전문대학 포함) 39.6%, 대학원 이상 3.4%였다. 거주지역은 농촌이 11.9%, 도시가 88.1%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월등히 많았고, 기초생활수급권의 비수급이 대다수(94.3%)를 차지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명(%)
성별	남	901(44.4)
	여	1,126(55.6)
수급 여부	비수급	1,191(94.3)
	수급	116(5.7)
교육수준	무학	39(1.9)
	초졸	196(9.7)
	중졸	202(10.0)
	고졸	719(35.5)
	대학(전문대 포함)졸 대학원 이상	803(39.6) 68(3.4)
지역	도시	1,785(88.1)
	농촌	242(11.9)
연령	M=49.54세(±15.74) 최소 20세, 최대 80세	
	20대	255(12.6)
	30대	270(13.3)
	40대	464(22.9)
	50대	466(23.0)
	60대	349(17.2)
70대 이상	223(11.0)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신뢰가 독립변수인 빈곤원인 인식과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의 영향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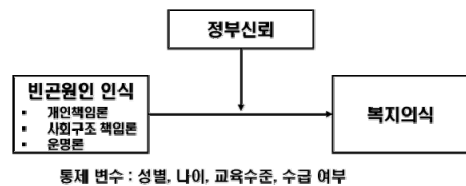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2019년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1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복지의식을 종속변수로, 정부신뢰를 조절변수를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빈곤원인 인식으로 설정하고 개인책임론, 사회구조책임론, 운명론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성별, 나이, 수급여부,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1 복지의식

복지의식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유되고 상호 학습되는 복지에 대한 집단 차원의 감정, 인식, 가치, 태도를 의미한다[18]. 본 연구에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해 가지는 가치, 신념,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의 측정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의식을 묻는 10문항¹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의식을 묻는 문항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매우 동의한다(1)'에서 '매우 반대한다(5)'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문항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복지의식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처리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너무 낮은(.3 이하) 3문항을 제외하고 7문항만을 최종 채택하였으며, 신뢰도는 .545였다.

1.2 빈곤원인 인식

빈곤원인 인식은 한국복지패널의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 11개 문항을 코딩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빈곤원인 인식 척도 10문항에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을 추가한 문항이다. 세 개의 하위요인(개인책임론 6문항, 사회구조책임론 4문항, 운명론 1문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중요치 않음(1)'에서부터 '매우 중요함(4)'까지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하위변수의 신뢰도는 개인책임론 .716, 사회구조책임론 .736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에 빈곤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우선, 개인책임론에는 '개인의 가계능력 부족', '동기와 노력 부족', '책임감과 자기규율 부족', '개인적인 질환과 신체적 장애', '학력수준 미흡' 등이 포함된다. 사회구조 책임론에는 '기업과 산업의 낮은 임금', '충분한 교육기회 부족', '좋은 일자리 부족', '빈곤층에 대한 차별' 등이 포함되며, 운명론에는 '개인적인 불행과 불우한 가족 배경' 등이 포함된다.

1 복지의식 문항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함,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름',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 있음', '부도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음',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최소한 서비스로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함',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포함된다.

1.3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믿는 정도로, 정부(기관), 정책과정, 정치리더가 약속을 준수하는지,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정직한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15].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 또는 사회구성원의 기대에 정부가 부응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9][19][20], 한국복지패널의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정책 평가 관련 11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정부의 사회정책 산출물에 대한 평가로, 14차년도부터 '청년들의 사회활동지원', '외국인 주민의 권리보장지원', '양성평등정책 지원'의 정부지출에 대한 평가 3문항이 추가되었다. "귀하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음이 각 정책영역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보건 의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서비스 및 아동복지, 빈곤예방 및 감소, 실업에 대한 대응, 성평등수준 제고, 주거복지, 교육, 외국인 권리보장, 청년들의 사회활동지원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833이었다.

1.4 통제변수

선행연구들에서 복지의식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21-25] 변수 중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별, 나이, 수급여부,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1), 여(2)로 구분하였고, 나이는 '한국패널조사 시점인 2019년'에서 '출생년도'를 뺀 값에 더하기 1을 더한 값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1)'에서부터 '대학원 이상(6)'으로 구분하였고, 수급여부는 '수급자(2)', '비수급자(1)'로 구분하였다.

표 2. 변수설명

변수명		변수의 측정	
종속 변수	복지의식	1=매우 동의, 2=동의, 3=동의도 반대도 없음, 4=반대, 5=매우 반대	
독립 변수	빈곤 원인 인식	개인책임론	6문항
		사회구조 책임론	4문항
		운명론	1문항
		1=전혀 중요치 않음, 2=별로 중요치 않음, 3=약간 중요함, 4=매우 중요함	
조절 변수	정부신뢰	1=매우 잘못하고 있음, 2=잘못하는 편임, 3=보통/그저 그렇, 4=잘하고 있는 편임, 5=매우 잘하고 있음	
통제 변수	성별	1=남 2=여	
	나이	(조사기준 년도-출생 년도)+1	
	교육수준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학(전문대 포함)졸, 6=대학원 이상	
	수급여부	1=비수급자 2=수급자	

4.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5.0 버전을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통해 모형의 정규성도 확인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는 빈도와 평균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 상호작용항의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한 후 분석하였다[26].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수 기초분석

설정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표 3]. 우선, 주요 변수들의 왜도는 0.00~0.41 범위였고, 첨도는 -0.52~0.89 범위에 있었다. 이는 Klein(2010)이 정규분포의 조건으로 제시한 왜도값(±3)과 첨도값(±10)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 연구모형은 정규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15점, 조절변수인 정부신뢰의 평균은 2.90점이었다. 빈곤원인 인식의 하위요인인 개인책임론은 4점 만점에 평균 1.97점, 사회구조책임론 2.05점, 운명론은 2.23점이었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복지의식	1.40	5	3.15	0.43	0.21	1.07	
빈곤 원인 인식	개인 책임론	1	4	3.00	0.48	-0.36	0.74
	사회 구조 책임론	1	4	2.95	0.56	-0.25	-0.02
	운명론	1	4	2.77	0.80	-0.13	-0.52
	정부신뢰	1	5	2.90	0.50	0.00	0.80

2. 주요 변수 상관관계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은 빈곤원인 인식의 하위요인 중 개인책임론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사회구조책임론, 운명론과는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표 4.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1. 개인책임론	1				
2. 사회구조책임론	.367**	1			
3. 운명론	.365**	.369**	1		
4. 정부신뢰	-0.019	.070*	.057*	1	
5. 복지의식	-.081**	.165**	.092**	.125**	1

*p<.05, **p<.01

3. 빈곤원인 인식과 복지의식의 관계 및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복지의식에 대한 빈곤원인 인식(개인책임론, 사회구조 책임론, 운명론)과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요인인 성별, 나이, 교육수준, 수급여부를 통제하였고, 독립변수로 설정된 빈곤원인 인식은 하위요인별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빈곤원인 인식(개인책임론, 사회구조 책임론, 운명론)과 조절변수인 정부신뢰를 투입하여 각 변수들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3단계에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R²변화량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3.1 개인책임론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 신뢰의 조절효과

빈곤원인 인식의 세가지 하위요인 중 개인책임론의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 및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의 설명력은 7.1%였고($p < .001$), 개인책임론과 정부신뢰를 추가한 2단계의 설명력은 8.0%였다. 그리고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는 8.4%의 설명력을 보였다($p < .001$). 1단계와 2단계의 R^2 변화량은 0.010($p < .001$)이었고, 2단계와 3단계의 R^2 변화량은 0.004($p < .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개인책임론($\beta = -0.07, p < .001$)과 조절변수 정부신뢰($\beta = 0.06, p < .01$)는 주효과로 복지의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빈곤원인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의식이 낮아지는 반면,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복지의식이 낮았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를 살펴보면, 개인책임론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beta = -0.10,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5. 복지의식과 개인책임론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상수)		37.74		37.81		37.93
성별	-0.04	-1.75***	-0.04	-1.81	-0.04	-1.73
나이	-0.15	-5.81***	-0.14	-5.34***	-0.14	-5.39***
교육수준	0.15	5.71***	0.14	5.29***	0.14	5.23***
수급여부	0.07	3.30**	0.08	3.45**	0.07	3.41**
개인책임론(A)			-0.07	-3.15**	-0.06	-2.83**
정부신뢰(B)			0.07	3.40**	0.07	3.38**
(A)*(B)					-0.06	-2.88**
R^2 (ΔR^2)	.071		.080(.010**)		.084(.004**)	
F	38.394***		29.444***		26.512***	

다미변수 : 성별(남=1, 여=0), 수급여부(수급=1, 비수급=0)
 * $p < .05$, ** $p < .01$, *** $p < .001$

조절효과가 검증된 각 항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 단순기울기를 살펴보았다. 단순기울기는 그래프 제시에서 가장 많이 권장되는 평균값과 $\pm 1SD$ 의 조건값에서 얻어진 복지의식 점수로 제시하였다[27][그림 2][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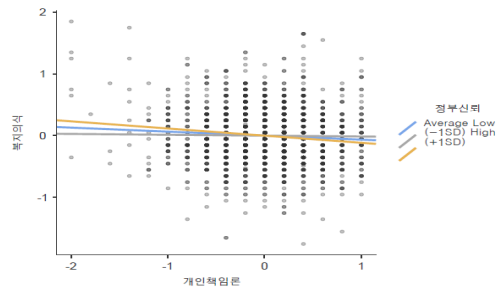


그림 2. 단순 기울기(개인책임론)

[그림 2]를 통해 개인책임론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신뢰에 따라 억제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3.2 사회구조 책임론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빈곤원인 인식의 하위 요인 중 사회구조 책임론의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력과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의 설명력은 7.1%였고($p < .001$), 사회구조책임론과 정부신뢰를 투입한 2단계의 설명력은 9.4%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는 10.1%의 설명력을 보였다($p < .001$). 1단계와 2단계의 R^2 변화량은 0.023($p < .001$), 2단계와 3단계의 R^2 변화량은 0.007($p < .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단계에서 사회구조 책임론($\beta = 0.14, p < .001$)과 정부신뢰($\beta = 0.07, p < .001$)는 주효과로 복지의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빈곤원인에 대한 책임이 사회구조에 있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복지의식이 높았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의 경우, 사회구조책임론과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항($\beta = 0.08,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6. 복지인식과 사회구조 책임론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상수)		37.74		37.63		37.60
성별	-0.04	-1.75***	-0.03	-1.52	-0.03	-1.43
나이	-0.15	-8.1***	-0.12	-4.67***	-0.12	-4.58***
교육 수준	.15	5.71***	.15	5.60***	.15	5.69***
수급 여부	.07	3.30**	.07	3.41***	.07	3.45***
사회구조 책임론 (A)			.14	6.35***	.14	6.43***
정부신뢰 (B)			.07	3.13***	.06	2.97***
(A)*(B)					.08	3.85***
R ² (Δ R ²)	1.07		.094(.023**)		.101(.007**)	
F	38.394***		34.930***		32.263***	

더미변수 : 성별(남=1, 여=0), 수급여부(수급=1, 비수급=0)
*p<.05, **p<.01, ***p<.001

[그림 3]의 경우, 사회구조책임론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신뢰에 따라 상승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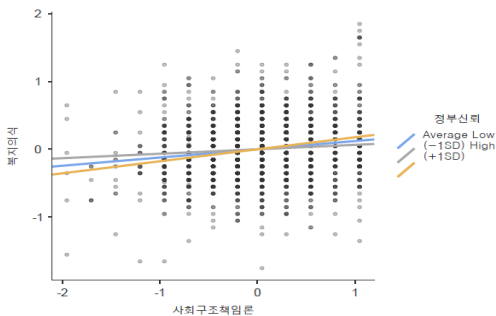


그림 3. 단순 기울기(사회구조책임론)

3.3 운명론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빈곤원인 인식의 하위 요인 중 운명론의 복지인식에 대한 영향력과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검증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의 설명력은 7.1%였던 반면, 운명론과 정부신뢰를 투입한 2단계와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의 설명력은 각각 8.3%로 설명력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3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항($\neq 0.00$, $p=0.9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표 7. 복지인식과 운명론의 관계에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

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β	t	β	t	β	t
(상수)		37.74		37.74		37.71
성별	-0.04	-1.75***	-0.04	-1.63	-0.04	-1.63
나이	-0.15	-5.81***	-0.14	-5.25***	-0.14	-5.24***
교육 수준	0.15	5.71***	0.15	5.53***	0.15	5.53***
수급 여부	0.07	3.30**	0.07	3.36***	0.07	3.36***
운명론 (A)			0.08	3.84***	0.08	3.84***
정부신뢰 (B)			0.07	3.20***	0.07	3.19***
(A)*(B)					0.00	0.06
R ² (Δ R ²)	.071		.083(.012**)		.083(.000)	
F	38.394***		30.318***		25.975***	

더미변수 : 성별(남=1, 여=0), 수급여부(수급=1, 비수급=0)
*p<.05, **p<.01, ***p<.001

II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들의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개인책임론, 사회구조 책임론, 운명론)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2019년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총 2,027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원인 인식의 하위요인 모두 복지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개인책임론은 복지인식에 부정적 영향력을 보인 반면, 사회구조책임론과 운명론은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원인 인식이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8]와 그리고 빈곤의 사회적 귀인이 복지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귀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8]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빈곤원인 인식 중 사회구조책임 인식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지향 정도가 높고, 개인책임 인식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지

향이 낮다는 연구[3]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빈곤이 개인적 책임에 귀인한다고 인식할 경우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빈곤을 사회적 귀인으로 인식할수록 복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충환의 연구에서는 운명론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인식할 경우 복지정책에 보다 공감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빈곤이 개인에 기인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복지의 필요성 및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을 개인이나 국가의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및 교육 등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8].

둘째, 정부신뢰는 복지의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빈곤원인 인식과 복지의식의 영향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정부신뢰는 개인책임론과 복지의식 간, 그리고 사회구조 책임론과 복지의식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운명론과 복지의식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일련의 분석결과는 정부신뢰가 복지의식에 대한 직접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원인 인식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충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의식 향상을 위해 정부신뢰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정책에 대한 높은 정부신뢰도가 복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수용한다고 주장한 최고은[9]의 연구, 복지정책 수행기관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복지예산확대 동의의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13][14]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또한 신뢰를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로 구분하여 복지의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본 조정하와 김성한[29]의 연구에서는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가 모두 복지의식에 정적 영향력을 보임을 보고하면서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공적 신뢰)는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신뢰(사적 신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특히, 노대명과 전지현[30]은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OECD 국가들 중 최저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국민들의 복지의식

제고를 위해서 빈곤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든, 사회구조적인 책임으로 인식하든 상관없이, 사회구성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할 것이다. 정부신뢰가 구성원들의 정부에 대한 주관적 믿음임을 고려해 볼 때, 정부에 대한 불신은 복지정책확대를 위한 복지재정 확보를 어렵게 할 가능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 및 정치리더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구하여 구성원들이 정부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은 정부나 정치리더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부 및 사회구성원들 각각의 역할을 점검하고 재정립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중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비수급자의 복지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친복지적이라는 조정하와 김성한[29]의 연구와는 유사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의식이 낮아진다는 연구[5]와 다른 결과이다. 또한 소득, 교육수준, 연령 등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오현주와 이상신[28]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특히, 소득은 수급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수급자의 복지의식이 높다는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친복지적 인식 전환 홍보 및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복지가 전체 사회질서 및 공동체를 위해 왜 필요하며, 사회적 연대를 위해 구성원들의 의무와 책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5].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빈곤원인 인식, 정부신뢰, 복지의식 등 변수 설정이나 문항의 구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 빈곤원인 인식의 경우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기는 하였으나, 운명론 변수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신뢰

도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변수들의 시간적 선행 관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인과관계 확보를 위해서는 개념적 고려 못지않게 변수들 간의 시간적 우선성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31].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빈곤원인 인식, 정부신뢰, 복지인식의 관계 및 조절효과 경로 파악의 정확성과 장기적인 효과성 확보를 위해 종단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원인에 대해 인식이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부신뢰가 이들의 영향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인식 향상에 있어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여유진, 오미애, 이병재, 최준영, 김근혜, 김선, 한겨레, 신재동, 박나영, 송지은, 정다운, 이봉주, 강상경, 박정민, 안상훈, 정원오, 백승호, 김화선, 신유미, 김정옥, 이주미,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 C. Brooks and J. Manza,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The Journal of Politics*, Vol.68, No.4, pp.816-827, 2006.

[3] 이충환, "빈곤원인 인식과 불평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7권, 제3호, pp.375-401, 2015.

[4] 정현태,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의 복지인식에 관한 주관적 인식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제6권, 제1호, pp.241-246, 2017.

[5] 강정희, 염동문,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0권, 제2호, pp.319-351, 2014.

[6] 이상록, 김형관,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1호, pp.163-189, 2014.

[7] 강상준, *사회복지사의 빈곤원인 인식이 분배정의 선호*

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공정성 및 소득불평등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8] 이미선, "빈곤원인인식이 정부 복지정책 확대에 미치는 영향: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문화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제3호 pp.803-812, 2018.

[9] 최고은,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1호, pp.125-150, 2016.

[10] 김신영,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11권, 제1호, pp.87-105, 2010.

[11] C. Mayer, H. Davis, and D. Schoorman,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0, No.3, pp.709-734, 1995.

[12] E. Kim, "The role of trust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an integrative model," *Administration and Society*, Vol.37, No.5, pp.611-635, 2005.

[13] S. Svallfors,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Unpacking a supposed relationship*, In B. Rothstein, and S. Steinmo.(eds).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New York: Palgrave, 2002.

[14] 이현우, "복지예산규모에 대한 태도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국제정치논총*, 제53권, 제2호, pp.249-280, 2013.

[15] 최성락, 전별,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 정부요소 및 개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2호, pp.238-248, 2019.

[16] 노민정, "COVID-19시대 사회안전망 평가와 정부신뢰가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2호, pp.154-165, 2020.

[17]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www.koweps.re.kr

[18] 김육진, "복지인식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4권, 제4호, pp.5-34, 2017.

[19] 김화연, 김민길, 조민호, "일-가정갈등이 사회참여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제28권, 제2호, pp.89-113, 2018.

- [20] J. Hetherington,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2, No.4, pp.791-801, 1998.
- [21] 이종섭,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pp.73-99, 2009.
- [22] 조돈문,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효과,”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1호, pp.157-193, 2001.
- [23] 최유석,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1호, pp.57-83, 2011.
- [24] 허영만, “복지의식 이데올로기 정향분석: 서울시민의 복지인식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2호, pp.99-118, 2009.
- [25] C. M. Federico, “When do welfare attitudes become racialised: the paradoxical effects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8, No.2, pp.374-391, 2004.
- [26] 오미옥, 이진향,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 경험: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494-502, 2018.
- [27] J. Cohen, P. Cohen, S. G. West, and L. S. Aiken,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3rd Ed.)*, Mahwa, NJ: Erlbaum, 2003.
- [28] 오현주, 이상신, “한국인의 빈곤귀인과 복지태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의정연구*, 제21권, 제2호, pp.165-200, 2015.
- [29] 조정하, 김성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신뢰, 수용, 소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5, 제1호, pp.86-114, 2018.
- [30] 노대명, 전지현,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31] 엄동문, 임채영, 정현태,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pp.401-423, 2015.

저 자 소 개

이진향(Jin-Hyang Lee)

정회원



- 1998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불어 불문학과(문학사)
- 2005년 2월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9년 8월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